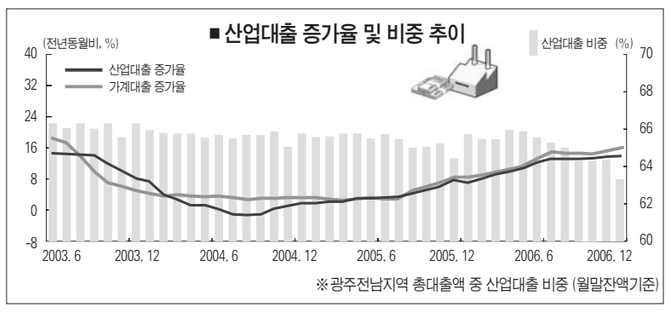
■광주·전남 은행 산업대출 살펴보니

서비스업 편중 심화

지난해 대출 증가분 1조 1,771억 중 절반 넘어



※광주전남지역 총대출액 중 산업대출 비중 (월말잔액기준)

광주·전남지역 산업대출(기업대출) 증가액이 가계대출 증가액을 추월한 가운데 금융·보험업과 학원·보건·부동산임대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 대출이 급증하면서 산업대출금의 서비스업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시설투자에 사용하기 보다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4일 발표한 '2006년중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내 예금은행의 산업대출은 1조1천771억원이 증가해 전년 증가분(6천48억원)보다 94.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총대출 증가액(2조2천185억원)에서 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53.1%로 가계대출 증가액을 추월했다.

산업대출 증가액을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6천11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을 필두로 제조업, 건설업 순이었다. 반면 농림업 대출은 837억원이 줄어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중에서는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업은 625억원 증가에 그친데 반해 금융·보험업과 학원·보건·부동산임대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대출이 전체의 89.8%인 5천485억원이나 급증해 학원, 의료시설, 금융업 분야의 산업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조업은 기아차 생산라인 증설로 인한 협력업체 증가와 조선·가전업체를 중심으로 대출이 전년에 비해 4배 가량 늘었고, 건설업도 운전자금 대출 급증으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자금용도별로는 시설자금대출은 497억원 늘어난데 그친 반면 운전자금대출은 산업대출의 95.7%인 1조1천274억원이 늘어 기업들이 은행 돈을 빌려 주로 운전자금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금난을 겪고있는 건설업체들의 운전자금 수요가 연초에 급증하면서 운전자금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는 건설업과 제조업 대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말 대비 13.1% 증가했고, 전남은 1.1%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별로는 2004~2005년 중 부진했던 시중은행 대출이 7천38억원 증가해 한해 전에 비해 18.4% 증가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박지원 조사역은 "산업대출이 증가한 원인은 우량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완화된 점도 있지만 금융업·보험업, 학원·보건·부동산임대업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이 분야의 창업 및 운전자금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한국무역협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한 '2007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이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열렸다. 다양한 레포츠 관련 전시 용품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연합뉴스

엘지MMA 김한섭 대표 철탑산업훈장

대한시멘트 장철행 대표 대통령 표창

납세자의 날 유공자 표창

여수 엘지엠엠에이(주) 김한섭 대표이사가 5일 제 4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로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다.

김 대표를 포함한 모범납세자 정부포상자는 ▲산업포장=모아건설산업(주) 장재율 대표이사 ▲대통령 표창=대한시멘트(주) 장철행 대표이사 ▲국무총리 표창=(주)광주방송 박흥석 대표이사 등으로, 이들은 5일 서울 COEX에서 열리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재경부장관으로부터 상을 받는다.

이와 함께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정병춘)은 이날 2층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갖고 모범성실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 표창한다.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에는 (주)아이팩코리아 임명섭씨 등 15명, 국세청장 표창은 의료법인 삼선의료재단 김계윤씨와 바른이치과 한강석 원장 등 18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은 가산토건(주) 조남설씨 등 42명 등이 포함됐다.

세정협조자 표창은 ▲재경부장관상=염동련 전남여상 교장 ▲국세청장상=나경택 연합뉴스 호남지사 부국장 등 4명 ▲광주지방국세청장상=박성수 전남대 교수 등 12명 등이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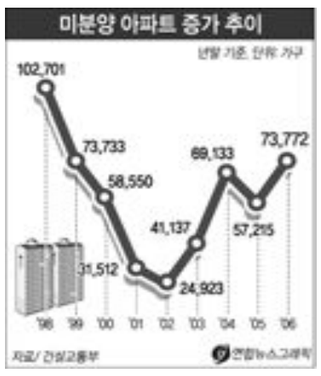
근로소득자 표창은 ▲국세청장상=의료법인 연희의료재단 가정의학2과장 민선영씨 등 2명 ▲광주지방국세청장상=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재무과장 김수현씨 등 3명이다.

유공공무원 표창은 ▲홍조근정훈장=정병춘 광주지방국세청장 ▲재정경제부장관상=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임호풍씨 등 10명 ▲국세청장상=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석춘씨 등 23명 ▲광주지방국세청장상=광주지방국세청 총무과 양철민씨 등 47명 등이 수상한다. 우수기관으로는 순천세무서가 국세청장상을 받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미분양 아파트 8년만에 최대

작년말 7만 3,772가구…민간아파트·지방에서 급증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분양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8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아파트의 미분양이 급증했으며, 지역적으로는 지방에서 크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3천772가구로, 2005년 말(5만7천215가구)보다 28.9%, 1만6천557가구 늘어났다. 연말 기준으로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듬해인 1998년에 10만2천701가구를 기록한 이후 8년만에 최고 기록이다.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에 일시 증가했던 미분양 주택은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다가 200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04년에 6만9천133가구까지 늘었으나 2005년에 다시 감소했었다.

공급주체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1년전에 비해 66.3%나 줄어 1천954가구가 됐지만 민간부문은 1년전에 비해 39.7% 늘어 난 7만1천818가구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체 미분양중 민간부문의 비율이 97.4%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천724가구)은 61.4% 감소한 반면 지방(6만9천48가구)은 55.5% 증가했다. 실제 주택경기를 반영하는 '준공후 미분양'도 지난해 말 1만3천654가구로, 1년전에 비해 24.3% 증가했다.

지난해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한 것은 지방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의 미분양이 계속해서 쌓인 데다 지난해 말부터는 분양가 규제로 인해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월중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 69%

5개월만에 60%대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천500곳을 상대로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올해 1월중 평균가동률은 69.5%로 작년 8월 이후 5개월만에 60%대로 떨어졌다고 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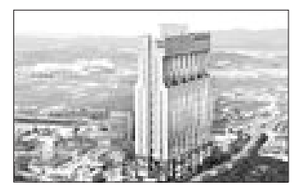
기업유형 및 규모별로는 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이 66.9%로 전월대비 2.2%p 하락했으며 중기업은 75.5%로 0.2%p, 이노비즈·벤처제조업은 72.9%로 2.9%p 각각 하락했다.

업종 평균가동률은 전 업종이 일반적인 정상가동률(80%)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비금속광물제품(61.0%), 목재 및 나무제품(64.4%), 의복 및 모피제품(65.9%) 등 업종의 가동률이 특히 저조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상무스타타워' 내일 기공식

'오피스텔·오피스' 복합 기능



상무스타타워 기공식이 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서 열린다.

시행사인 '집바라기'측은 이날 상무지구내 이마트와 콜럼버스 영화관 사이에서 오피스텔과 오피스기능이 복합된 상무스타타워 빌딩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무스타타워는 지상 14층 규모로 3~9층은 맞춤형 섹션 오피스로, 10~13층은 오피스텔로 지어질 예정이다.

집바라기측은 맞춤형 섹션 오피스의 경우 수요자가 원하는 용도와 크기, 자금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오피스텔은 소형 평형대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당 분양가는 470만~1천900만원선이다.문의는 062)385-9500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현금영수증 요청 안해도 자동 발급

오늘부터 '지정코드' 도입

현금영수증 가맹의무 사업자들이 악의적인 '세(稅)파라치'에 의해 피해를 보지않고 영업을 할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지정코드가 도입됐다.

국세청은 4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정코드(010-000-1234)를 도입,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세파라치'의 고의적인 현금영수증 미요구뒤 신고 등에 의해 선의의 사업자가 불필요한 마찰이나 분쟁 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